

與 “尹 정부의 망가진 1060일” vs 野 “李 정부 실정·무능”

오늘부터 국정감사 실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여부 ‘주목’
與 “사법부 독립·신뢰 판가름”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여부도 ‘관심’
기업인 약 200명 증인·참고인 채택

입법부가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국정감사를 13일부터 18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파헤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베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싸움꾼’이 돼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을 밝힐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 사법부 운명의 한 주, 조희대 출석 여부 주목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첫째 주의 최대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실시한 ‘조희대 청문회’가 당사자의 국회 출석 없이 무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며 다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시한 상한으로 압박하고 있다.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피감기관 좌석과 의원석이 정돈돼 있다. /뉴시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 가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판가름 하는 한 주가 되리라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을 때가 아니고, 절대 숨겨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일을 했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어떤 태도를 취했나. 지귀연 부장판사가 낱자 대신 시간 계산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을 때 한마디 입장이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신속한 파기환

송 과정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보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는 것이 헌정 관례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

거”라고 질타했다.

◆ 정치권 관심 집중, 김현지 국감 나올까

연휴 내내 정치권의 입에 오르내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김 부속실장은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총무비서관으로 일했으나 야당의 국감 출석 요구가 이어지던 지난달 9월29일 부속실장으로 인사 이동됐다. 총무비서관은 역대 정부에서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지만, 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과 달리 국감 출석 의무가 없다.

여당은 김 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이 여야 합의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증인 참석 여부는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며 “김 부속실장의 인사 이동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계획이 실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 증인으로 불참시키기 위해 그랬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안 맞다”며 덧붙였다.

반면,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5군데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니 정쟁이라고 하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학생이 수업 5개를 듣기 힘들다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구심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니다. 여당이고 대통령실”이라며

“김 부속실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공공 청백방으로 숨기나”라고 반문했다.

◆ 기업인도 대거 국감 출석…들러리 재현되나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증인·참고인 출석도 변함 없을 전망이다. 이번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 채택된 상임위의 경제계 인사만 증인·참고인 포함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9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경제계에선 글로벌 통상 파고 속에서도 경영 판단을 해야 할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 질문도 하지 않고 들러리만 세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이어졌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이 기업인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채택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계에선 국내 하반기 최대 행사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번달 말부터 열릴 예정이어서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대통령, 민생정책 소통·APEC 정상회의 준비 ‘분주’

연휴 보내고 오늘부터 업무 복귀
내일 ‘디지털 토크 라이브’ 열어
APEC 한미·한중 양자회담 유력

추석을 포함한 연휴의 긴 연휴 기간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생정책을 주제로 직접 소통에 나선다. 또 2주 기량 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무사 개최,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미 관세 합의 후속협상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긴 연휴 동안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며 열흘 간 휴식과 함께 난마처럼 얽힌 국내외 국정 현안 해법 찾기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업무에 공식 복귀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추석 명절 인사를 하는 모습을 7일 SNS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나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SNS

연휴 기간 중 취합된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민생 정책과 관련한 소통을 이어간다. 이 같은 맥락에서 14일에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가 열린다.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의 진솔한 경험 및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나, 정치권의 구호 대신 국민들에게 실제 효과나 개선점 등을 직접 듣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취합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행사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한 국민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지털 토크 라이

브’ 국민패널 모집을 알리며 “현장에서 느낀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길잡이가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름 정도 남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도 이 대통령에게는 큰 과제다. 이 대통령은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이는 외교 ‘빅 이벤트’를 무사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또 주요 2개국(G2·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 ‘실용외교’를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방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당일치기 또는 1박2일간 머물 것으로 알려져 APEC 정상회의의 흥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평) 중국 국가주석과 APEC에서 만나자고 공언하며 G2의 화해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최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운 분위기로 변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고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한미·한중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유의미한 한중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관세합의 후속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APEC 계기 타결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한다.

/서예진 기자 syj@

당정대, 고위당정협의회의서 부동산 등 민생과제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비공개 회의
이주 세번째 부동산 대책 나올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12일 한 자리에 모여 향후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안과 민생 중심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종로

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대는 추석 연휴 각계각층으로부터 청취한 민심을 공유하고, 물가 부담 등 민생 전반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

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거 안정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초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13일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대응 전략과 관련해 주요 현안 점검과 메시지 관리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이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